

경전철반대 BRT전면 도입 시민대책위원회 경전철반대 BRT전면 도입 시민대책위원회 경전철반대 BRT전면 도입 시민대책위원회 경전철반대 BRT전면 도입 시민대책위원회 경전철반대 BRT전면 도입 시민대책위원회 경전철반대 BRT전면 도입 시민대책위원회 경전철반대 BRT전면 도입 시민대책위원회 경전철반대 BRT전면 도입 시민대책위원회 경전철반대 BRT전면 도입 시민대책위원회 경전철반대 BRT전면 도입 시민대책위원회 경전철반대 BRT전면 도입 시민대책위원회

경전철반대 BRT시스템 전면도입을 지지하는 지식인 100인 선언

일 시 / 2004년 5월 18일(화) 오전 10시 30분

장 소 / 대전광역시 기자회견장



- 개 회
- 참석자 인사
- 인사말
- 경전철반대 BRT시스템 전면도입을
지지하는 지식인 100인 선언문 낭독
- 질의 응답
- 폐 회

경전철반대 BRT전면도입 시민대책위원회

■ 소속단체 / (사)한국산재노동자협회대전지역본부, 대전YMCA,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전여민회, 대전여성환경포럼, 대전실업극복시민연대 일어서는사람들, 대전자활후견기관협회, 대전주부교실대전지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환경운동연합, 민들레의료생협,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 뽕엘의집, 소비자문제해결을위한시민의모임대전지부, 충청버스사랑동우회, 한발렛츠, 한발생협, 전교조대전지부, 민변대전지부 (이상 22개 단체)

<경전철 건설반대 BRT 시스템 전면도입을 지지하는 지식인 100인 선언문>

시민부담 줄이고 생태적인 차세대 대중교통수단 BRT 시스템 전면도입을 권고한다.

대전의 시민사회 발전에 책임을 느끼고 있는 우리는 오늘 대전시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철도 건설과 관련하여 시민사회의 의사를 전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다. 연구실과 강의실이 아닌 곳에서 우리의 의사를 전달해야 하는 현실이 개탄스럽지만 우리가 침묵하는 가운데 왜곡되고 있는 시민의 의사와 시민재정의 낭비를 예방하는 지식인으로서의 마땅한 역할이기에 후회는 없다.

주지하다시피 우리 대전시는 도시철도 건설로 막대한 재정과 교통체증에 의한 환경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착공 후 8년 동안 1조 8천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 부었지만 2006년 개통까지 문제가 산적해있으며, 천문학적 운영적자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승용차에 의한 도로 교통, 환경의 문제는 140만 대전시민에게 고통스런 미래를 가져다줄 뿐이다.

이러한 때 시민사회단체가 도시철도의 연장선인 경전철 건설을 반대하고 대안으로서 도시교통체계의 혁신적 전환을 의미하는 BRT시스템의 전면도입을 주장하고 나선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다. BRT시스템은 열악한 지방재정의 파탄을 초래하지 않으면서 적은 비용으로 도로망과 교통체계를 손질하여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꿈의 교통수단을 실현하자고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미 우리는 서울시와 부산시, 대구시의 사례에서 도시철도는 더 이상 경제력이 부족한 대도시의 대중교통수단으로 적합하지 않음을 보았다. 열악한 지방재정으로는 천문학적 건설비용과 유지비용 총당이 어렵고, 재정적 책임은 물론 그에 따른 환경, 복지 서비스의 하락 등 시민들의 희생을 방법이 없다. 또한, 버스처럼 간선과 지선, 마을까지의 연계가 부족하여 대문 앞에서 목적지까지 편안한 이동을 요구하는 우리 시민의식에 적합한 서비스를 기대할 수도 없다. 따라서 1호선에 이어 2호선이 또다시 정치적 타협의 산물인 철도로 건설된다면 현재 대전시가 고질적으로 안고 있는 재정난, 도로교통과 환경의 악화, 시민부담 증가의 사이클은 회복불능의 사태를 향해 치달게 될 것이다.

하여 우리는 도시철도의 근본적인 문제를 대전시와 시의회 등 우리 지역의 주요한 정책결정 단위에서 깊이 있게 진단하고, 진정 무엇이 시민을 위한 교통수단인지 새롭게 접근해야 한다고 제안하는 바이다.

정치권을 위한 결정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건설비와 운영비용을 부담하고, 그것을 이용하고, 부차적인 영향을 감당해야 할 시민의 관점이 차세대 대중교통수단의 선정에서 우선되어야 한다. 지금 우리가 결정하는 교통수단은 우리 세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전에서 대를 이어 살아갈 후손들의 이동방법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결정은 정치적 정당성도 있어야 하지만 세대간 형평성과 도시발전의 지속가능성도 함께 담보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서울시가 그 많은 철도건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도로교통량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버스로 접근하는 데 주목한다. 또, 인천시가 경전철 건설을 결정한 뒤 80억원이 넘는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고도 다양한 문제가 예견되자 이를 포기하고 버스개혁으로 접근한 사례를 주목한다.

대전의 정치권이 이러한 흐름을 외면하고 시민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시민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BRT시스템은 철도에 대하여 단순히 버스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 철도보다 경제적 비교우위에 있으면서 도시 곳곳을 막힘없이 이어주는 고급교통수단을 선택하는 것은 물론, 도로상의 교통량을 적극 줄이고 자전거와 보행 등 녹색교통을 촉진하는 생태적 도로교통 정책으로의 발전을 의미한다.

또한, 노약자와 임산부, 어린이, 장애인 등 지하터널과 고가도로 중심의 철도에 접근하기 어려운 교통약자들이 불편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적극적 복지정책이다. 따라서 경전철과 BRT시스템의 경쟁적 도입은 대전시가 차세대 교통수단 결정에 있어서 경제성과 환경성, 사회복지, 미래지향성 어느 하나도 실현하지 못하는 매우 현명하지 못한 결정이다.

대전시와 시의회는 그동안 정치권과 관련 전문가를 중심으로 독점해온 교통수단 결정권을 시민사회로 확대하여 시민이 선호하고, 시민을 편안하게 하며, 시민경제를 파탄 내지 않는 교통수단을 시민이 선택하게 해야 한다.

지금 이 순간의 개발논리로 시민을 현혹하고 정치를 재생산하는 근시안적 정치.행정에서 벗어나 시민의 품에서 자유롭고 즐거운 정치.행정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시민을 위한 저비용 고효율의 생태적 대중교통체계 BRT시스템의 전면도입과 경전철 건설포기 결정을 대전시와 의회에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04. 5. 18.

경전철 건설반대 BRT 시스템 전면도입을 지지하는 지식인 선언 참가자 일동

강낙규 강병수 강철현 강현수 구본학 권선희 김겸훈 김귀덕 김대현 김두현 김병미 김병운 김선미 김선태 김성덕 김성한 김양주 김연수 김영철 김영호 김용덕 김용세 김용휘 김재영 김정숙 김조년 김주현 김태범 김학민 김형돈 김혜천 나경수 나준식 남상호 류병로 류진석 문상원 민소영 박기서 박재묵 박정균 박종만 박찬인 손동광 송동호 신동호 신정철 신현중 신호상 심재호 안성호 안정선 여운철 오성균 오세열 오세은 윤종삼윤창식 윤태천 이 현 이강훈 이기훈 이동규 이문지 이봉재 이상호 이소라 이윤화 이은구 이재영 이정규 이준우 이진현 이창기 이창수 이현주 장동환 장수찬 장수한 정보건 정성진 정순진 정은희 정종관 조복현 조삼래 조연상 조영탁 조영호 주광석 차재영 최봉문 최용석 최정석 최정우 한승동 한원규 한진석 허양운 허재영 황정숙 (이상 100명)

별첨 / 이후 각계 릴레이 지지선언 일정

경전철 건설을 반대하고 BRT 시스템의 전면도입을 요구하는 각계의 지지선언은 아래의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경전철 반대 BRT 시스템 전면도입을 요구하는 주부(아줌마) 선언

*보도자료로 대체

■경전철 반대 BRT 시스템 전면도입을 요구하는 장애우 선언

*일시 : 2004. 5. 20(목) 오전 11시

*장소 : 대전환경운동연합 환경교육센터

■경전철 반대 BRT 시스템 전면도입을 요구하는 대학생 선언

*보도자료로 대체

■경전철 반대 BRT 시스템 전면도입을 요구하는 운수종사자 선언

*일시 : 2004. 5. 25(예정)

*장소 : 대전시청 기자실(예정)

■경전철 반대 BRT 시스템 전면도입을 요구하는 청소년 선언

*보도자료로 대체

■경전철 반대 BRT 시스템 전면도입을 요구하는 노동자 선언

*보도자료로 대체